



# “다른 법에 등록된 보관업도 ‘물류창고업법’에 등록해야”

## 등록제 도입관련 간담회... 쟁점사항 아직 남아

지난 7월 8일 여의도에 위치한 통합협회 사무실에서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에 관련된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물류창고업 등록제 도입과 관련된 입법사항에 대해 각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국토해양부 구자명 과장을 포함해 통합물류협회 김진일 회장, 일반 물류창고업자, 냉동냉장 관계자, 위험물 관계자, 보세 관계자, 배후단지 관계자, 연구소 관계자 등 총 12명이 참가했다.

주요 쟁점 대상은 △요금 등의 게시 의무, △창고 증권교부 및 보험가입 의무화, △창고업의 등록 등의 업무 협회 위탁, △창고 소재지 별로 등록 Vs 주 사무소·영업소로 구분 등록, 다른 법률에서 등록 또는 신고한 보관 관련 사업에 대한 제외 여부였다. 아직까지 쟁점사항이 남아 있어 업계의 의견수렴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토부 “조금 더 검토해 보겠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큰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다른 법률에서 등록 또는 신고한 보관 관련 사업에 대한 제외 여부였다. 다른 법률에서 등록 또는 신고한 보관 관련 사업은 보세창고, 식품 보존업, 축산물 보관업, 취급제한물류보관·저장업 등이 있다. 업계는 인프라에 대한 등록제이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류시설 연구소의 손병석 박사는 “이러한 관련 산업들의 등록 및 신고는 제품에 대한 인허가로 물류창고업 등록제는 제품이 아닌 인프라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창고협회장의 유태식 회장도 의견을 같이 했다. 유회장은 “인프라에 대한 등록제지 아이템에 대한 것은 아니다”며 “전체적인 인프라에 대한 것이라면 당연히 포함 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미종합물류의 김준기 전무도 “보세의 경우 특성을 관리하는 개별법에 맞는 제품이 수입되어야 보

세 창고 특허가 나온다”며 “차후 상황이겠지만 창고업 등록제를 입법화 한다면 관세법에서 등록제 안에 들어가 있는 창고에 대해 보세창고 특허를 내줄 것 같다”고 말했다. 수협의 양태영 팀장은 “농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것은 분명 농림수산물부와 논의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은 부처간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며 인프라를 등록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국토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구자명 과장은 “사실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시간이 흘러 지원이 약해지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여기 있지 않은 분들 중에 다른 생각을 가진 분이 있을 것”이라며 조금 더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 “요금 게시의무는 현실에 맞지 않아”

창고업의 등록 등의 업무 협회 위탁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회가 의견을 같이 했다. 구자명 과장은 “협회에 위탁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협회가 조직을 완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물류창고가 서울 경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지방의 물류센터들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것. 김진일 회장은 이에 대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요금 등의 게시 의무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이라는 의견이다. 김준기 전무는 “보세의 경우 요율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졌지만 요율을 게시하고 있다. 하지만 요율을 다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세창고의 예를 들어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로 요율을 게시한다고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실행이 되지 않는다.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구자명 과장도 “현재 시장에서는 맞지 않는 것 같다. 화주의 경우 원할 수도 있지만 시장경제에서

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손병석 박사는 “사실 업계에서 모르니까 당하는 경우도 있다”며 “협회에서 적정요율에 대해 연구해 발표하는 것도 불특정 다수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아닌 협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창고 증권 교부 및 보험가입 의무화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보험가입을 의무화 했을 경우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유태식 회장은 “굳이 의무화를 하지 않더라도 건물에 대한 보험은 다 들고 있으며 동산에 대한 보험은 화주가 들고 있다”며 보험료의 인상을 가져올 수 있는 의무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창고 소재지 별로 등록 Vs 주 사무소·영업소로 구분 등록하는 문제는 창고 소재지 별로 등록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다. 천마물류의 김필립 대표는 “인프라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장이 위치하고 있는 소재지 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김종호 사무관 또한 “창고는 움직이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소재지 별로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간담회 마지막에 구자명 과장은 “업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처음 하려는 취지에 맞게 준비해서 진행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창고 등록제에 대한 업계의 오해가 없도록 협회에서 Q&A를 만들어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의 주요 입법 구상(안)에는 물류창고와 물류창고업의 정의, 등록대상, 물류창고의 종류 및 등록기준, 우수물류창고업자 인증, 물류창고업의 육성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신인식 기자 story2021@klnews.co.kr〉